

국가난제로서의 지역소멸 현상 분석과 대응 방안

한웅규(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거스를 수 없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 쇠퇴'와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지역인구 감소'는 개별 영역에 한정되거나 단순히 지역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강건과 유지까지 연결되는 이슈이다. 지역위기는 공공성과 파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가 대응해야 할 '국가난제(national wicked problem)'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비수도권 도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지역산업 쇠퇴)'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지역인구 감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두 가지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 분야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이슈의 난제적 속성을 진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의 난제적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STEPI 국가난제 프레임 하에서 지역난제의 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을 진단한다. 먼저, 지속성 측면에서 지역위기의 연대별 이슈를 탐색함으로써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지역위기의 복잡성을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 현상을 난제 지형도 형태로 시각화함으로써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다이나믹스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를 야기하는 근저의 원인들을 발굴하고자 인과순환지도를 생성한다.

이어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STEPI 국가난제 속성을 진단한 결과(연대별 전개 과정, 난제 지형도, 인과순환지도)를 기초자료로 하여 지역분과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11대 정책대안을 도출한 후, 계층화분석법(AHP)을 통해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평가 결과, 전문가들은 '인접 지역 간 협력 강화 및 초광역 경제권 산업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지목하고,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청년 지원 강화', '정주 여건 개선사업 및 여성 지원 정책 확대'가 중요한 차순위 정책대안으로 나타난다.